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9호

발행일: 2023. 8. 14. (월)

제408회 국회(임시회, 2023. 7. 10. ~ 2023. 7. 2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규제과학 진흥
- 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 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라.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08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19일간 진행되었으며, 7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7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8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5)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산림황폐화 방지 및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 규제과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제408회 국회의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행정안전위원회(11)	<a href="#">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2		<a href="#">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3		<a href="#">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		<a href="#">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5		<a href="#">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만희 의원 등 10인
6		<a h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		<a h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8		<a href="#">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용판 의원 등 13인
9		<a href="#">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한규 의원 등 10인
10		<a href="#">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용판 의원 등 12인
11		<a href="#">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a>	윤관석 의원 등 14인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a href="#">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3		<a href="#">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4		<a href="#">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		<a href="#">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6		<a href="#">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7		<a href="#">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승남 의원 등 12인
18		<a href="#">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소병훈 의원 등 11인
19		<a href="#">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개호 의원 등 10인
20		<a href="#">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홍걸 의원 등 10인
21		<a href="#">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a>	김승남 의원 등 11인
22	<a href="#">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a>	서삼석 의원 등 10인	
23	보건복지위원회(15)	<a href="#">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24		<a href="#">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25		<a href="#">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6	환경노동위원회(15)	<a href="#">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27		<a h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a>	전혜숙 의원 등 10인
28		<a href="#">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a>	신현영 의원 등 27인
29		<a href="#">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선우 의원 등 15인
30		<a h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기윤 의원 등 10인
31		<a href="#">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영희 의원 등 11인
32		<a href="#">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종윤 의원 등 11인
33		<a href="#">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a>	백종현 의원 등 11인
34		<a href="#">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혜영 의원 등 11인
35		<a href="#">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명희 의원 등 19인
36		<a href="#">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종윤 의원 등 10인
37		<a href="#">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a>	인재근 의원 등 10인
38		<a href="#">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39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40		<a href="#">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41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42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환경노동위원장
43		<a href="#">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전해철 의원 등 10인
44		<a href="#">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김형동 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5		<a href="#">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a>	노웅래 의원 등 10인
46		<a href="#">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a>	임이자 의원 등 10인
47		<a h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노웅래 의원 등 10인
48		<a href="#">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a>	노웅래 의원 등 12인
49		<a href="#">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장경태 의원 등 11인
50		<a href="#">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임종성 의원 등 10인
51		<a href="#">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원택 의원 등 13인
52		<a href="#">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송옥주 의원 등 10인
53	국토교통위원회(19)	<a href="#">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4		<a href="#">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5		<a href="#">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6		<a href="#">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7		<a href="#">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8		<a h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59		<a href="#">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60		<a h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61		<a h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62		<a href="#">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a>	홍기원 의원 등 24인
63		<a href="#">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허영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4		<a href="#">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서일준 의원 등 12인
65		<a href="#">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수홍 의원 등 10인
66		<a href="#">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강대식 의원 등 10인
67		<a href="#">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정재 의원 등 14인
68		<a href="#">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69		<a href="#">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송재호 의원 등 10인
70		<a href="#">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용판 의원 등 11인
71		<a href="#">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상훈 의원 등 10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규제과학 진흥, 국외산림탄소 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규제과학 진흥

#### 개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은 우리 주변 물질과 현상의 인과관계와 메커니즘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학입니다. 개발된 방법과 규제과학에서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적절하게 예측, 평가,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공중보건에 기여합니다. 특히 첨단기술로 개발·제조되는 혁신 의약품의 임상 적용, 편리한 신규 화학 물질의 시장 도입,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규제과학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이러한 신기술의 혜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들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과학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관과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규제과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국회도 최근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입법을 단행하였습니다. 규제과학은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6호 규제혁신 이슈 참조](#)).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a href="#">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a></p> <p>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이에 혁신제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하여 제품개발 초기(R&amp;D)부터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규제당국과 산업계에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이 활용·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품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순환 지원체계를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p>	2023-07-27 (수정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 과제목표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

[120대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환경부·식약처)

### 과제목표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 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적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쏠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 임상시험설계· 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 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 주요 내용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 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 온라인· 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 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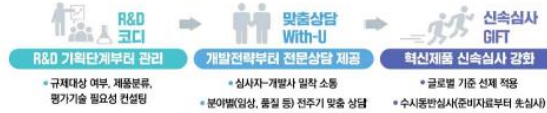
2023 정부 업무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1. 9.)

2. 규제지원 가교를 통한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

AS - IS	혁신성을 고려한 신속 맞춤형 초기단계 규제과역 기반 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 제품화 시행착오 방지 강화 필요	▶	TO - BE	기술이 제품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도록 가교가 되는 규제지원 토털 프로그램 추진 ▶ 전주기 규제지원 가교(BRIDGE) 구축
---------------	---	---	---------------	---

1) 신속한 맞춤 규제서비스로 기술의 제품화 촉진

- **신속지원** 제품별 담당자(PM)를 통한 개발전략 맞춤상담(With-U)부터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GIFT) 운영까지 전주기 제품화 집중지원



- **기술-규제 정합성** 국가 R&D 기획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을 동시 검토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대상 확대  
\* (22) 범부처의료기기사업, 신변증감염병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등 4개 사업  
→ (23) 기존 4개 사업 + 범부처재생의료사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사업

2) 민·관 규제역량을 높여 기술혁신 대응력 확보

- **인재양성** 규제과학대학원(8개 분야)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23~27, 600명)과 산업현장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23~27, 24,120명)  
\* 식품(기능성 안전성), 의약품(유효성) 안전성 제조품질관리, 의료기기(첨단융복합), 공통(규제정책)
- **심사역량**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신기술 규제역량을 높이고, 경력별·분야별 역량평가·진단·교육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심사역량 제고

3) 국가 규제서비스 제도적 기반 확립

- **근거법률**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으로 체계적 규제서비스 지원  
\*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평가 연구 및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에 관해 규율
- **전담기관**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 확대로 규제과학 허브 역할 정립  
\* 규제과학 Think-Tank 역할 수행, 전문인력·현장수요 매칭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3. 1. 9.)

5)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 생산 10억 원 증가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7.4명

-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인재양성) 생산·연구인력 11만 명(~27) 육성방안 수립 (23.상)
  - (글로벌연계)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 (22) 43개 중저소득국 492명 WHO, ADB 협력 교육 → (23)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
  - (규제혁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 추진,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상용화 촉진  
\*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 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 23.상)
  - (거버넌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계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 추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식약처, 규제과학에 기반한 체계적 규제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양성 위한 한미 상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제1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농업 부문 규제과학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1 2022. 12. 30.

- 본 연구는 생산성·경제성·금전 가치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공공성·다원적 가치 중심으로의 농업 재정의 및 전환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규제과학 도입을 공론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질문 ①) 농업 부문 규제과학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 농업·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해야 할 시의적절하고 정당한 정책가치인가?
- (연구질문 ②) 농업 부문 규제과학 도입에 예상되는 정책저항, 농정현안 및 농업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 부문 규제과학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1-03 2021. 10. 31.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산업·주요 국내 정책 동향 검토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법제의 제정 배경 및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하여 생명공학 규율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중복규제·규제공백 등의 규제법 차원에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이오산업의 혁신촉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발굴하고 국내외 생명공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나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규제법적 분석·연구를 수행함

[신약 시장 패권을 가지기 위한 규제 과학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법연」 Winter 2018 Vol. 61 2018. 12. 1.

우리나라 식약처는 FDA나 EMA 대비 인적 물질적 예산이 매우 적다. 5대 산업 이후 다음 세대에 바이오 신약개발 시장을 키워서 먹거리를 넘기려면 그만큼 우리나라 식약처의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전문가를 키우고 해당 영역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규제과학 논쟁의 연구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제143호 2003. 12. 31.

이 글은 中島貴子, "論争する科學: レギュラトリ | サイエンス論争を中心に", 金森修, 中島秀人 編著, <科學論の現在>(勁草書房, 2002), pp. 183-201을 번역한 것이다.

## 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 개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이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

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 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은 기업들의 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REDD+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1호\(창간호\)에서 다룬 2050 탄소중립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및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a href="#">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a></p> <p>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진 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함. 특히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RED)’을 제안한 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으며, 2015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Framework for REDD, WFR)’를 통해 REDD 방법론이 완성되었음. 이에 산림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sub>2</sub>감축하며 배출권 발생에 성공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3-07-27 (수정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주요 내용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 치료금 한도, 휴업급여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 [120대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 과제목표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자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주요 내용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 예산)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 2023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2023. 1. 12.)

- **(REDD+)** 국외감축원 확보('30: 5백만CO<sub>2</sub>)를 위한 **REDD+ 확대 및 기반구축**
  - 라오스 등과 준국가 수준의 **대규모 REDD+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한 **ESG경영 연계 및 대상국 협력 확대**
    - \*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도국 산림전용황폐화 방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유엔은 준국가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권장
  - 가봉, 페루 등 **국외탄소감축량 확보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신규협력** 추진
    - \* ▲가봉: 13백만톤('18 '30년 국외감축목표 39%) ▲페루: 77백만톤(추산 '30년 국외감축목표 230%)
  - 「**해외산림탄소감축법**(상임위 회부 '22.11.1)」 제정 등 **법·제도** 기반 구축
    - \*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출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청 누리집

## 참고 자료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 2.

[2030년까지 국외산림 활용 온실가스 감축 실적 500만톤 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 산림청 누리집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REDD+\)](#) 산림청 누리집

[REDD+ 활성화 및 체계적 이행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 연구 22-16-③ 2022. 10. 17.

본 연구를 통하여 REDD+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반영하고, REDD+ 활성화 및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법제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REDD+ 체제 구축과 이행: UNFCCC REDD+ 협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80호 2015. 8. 17.

본고에서는 REDD+와 관련하여 국제 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REDD+ 체제완성을 위하여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27 2010. 7.

본 과제의 목적은 COP-15에서 합의된 “REDD+를 포함한 즉각적인 메커니즘 설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Framework 및 향후 REDD+ 협상 전망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 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개요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수는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에 포섭됩니다. 그동안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교통약자 비율은 '26년까지 1,682만 명으로 연평균 약 2.0% 증가하며, 특히, 고령자가 연평균 5.6%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5호에서 다룬 장애인 및 출형 통합지원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a h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p> <p>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임으로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p>	2023-07-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 과제목표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주요 내용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항공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2023년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3.)

#### ②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 (이동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근거를 마련(23.下, 교통정책기본법 제정)하고,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사각지대 해소) 벽오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 광역교통권 내 시외버스도 비용 지원(現 시내버스만 지원)
  - \* 지자체가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운영을 명령하고 운행손실 일부 지원(30%)
  - 기존 버스 노선을 감축하는 지역은 소형버스·택시 등 대체수단 운영
    - \* 노선 효율화 등을 위한 공공형버스 운영지원(50%), 공영차고지 건설·개선 지원(30%)
- (교통약자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24시간·광역 이동 등이 가능토록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비 국비 신규 지원(23.7)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 활성화방안 마련(23.下)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성 의원안 등: 교통복지지표의 개발·작성 등](#) 2022. 4.

[이종성 의원안: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지원](#) 2022. 9.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누리집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19. 12. 24.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동향, 관련 논의와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인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계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월간 교통」 2022-08 2022. 8. 20.

[시론] 장애인 이동권, '공평'을 넘어 '포용'의 단계로 가야

[특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특집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사회적 가치: 장애인콜택시를 중심으로

[특집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안전 제도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특집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과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빌리티 정의 사회를 위하여

[특집4]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특집5] 핀란드의 '모두를 위한 교통(Transport for All)'과 평등한 접근성 정책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한국교통연구원 「월간 교통」 2018-12 2022. 8. 20.

[시론] 교통사고 장애는 사회적 케어 시스템으로

[특집]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특집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현황

[특집 2]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의 도입에 따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고찰

[특집 3] Barrier-Free 교통수단의 필요성 및 이해

[특집 4]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시외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고1] 장애인과 교통

[기고2]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 라.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강화

### 개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 하천의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녹조의 발생 및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관리일원화 등 물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p><u>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p>	2023-07-27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요 내용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22~)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  
성화 동시 달성
-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희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  
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 곰 사육 종식(~'25), 야생동물 질병관리 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  
존 기반 강화
-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 예측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  
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환경부, 2022. 7. 18.)

② [물 안전] 재해·사고 없는 안심 물관리

-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수돗물 품질을 ICT로 관리(취수~가정, '24~), 영남권 청정식수 공급\* 착공('25년), **물값 인상 없이 안정적 공급**
  - \* 낙동강 본류에 의존하는 대구(66%), 부산(88%) 등 수돗물 불안 해소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234원/㎥)**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 대상 감면폭 확대('21년 2개월 → '22년 최대 6개월)
  - 산업활동의 기본인 **공업용수도 양질의 물을 안정적 공급\***
    - \* 경기(파주·CD), 평택(반도체), 충남(대산석화), 충북(청주반도체, 전남(광양철강) 등 산업기밀 공급 확충
- **(홍수 안전)** AI 홍수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완비하고, **하천의 안전투자\*** 확대
  - \* 국가하천 제방 정비를 향상('20년 80%→'26년 90%) 등
  - 도시 **침수위험지도 구축**(~'25), 위험지역은 빗물 펌프장 개선·저류 시설 설치·하수관 키우기 등 선제적으로 방재
- **(싱크홀)** 싱크홀을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 개량**(~'26년까지 200km)
  - \* 하수관 결함(구멍, 파열) → 땅속 토양 유실 → 빈 공간 발생 → 상부 땅 꺼짐
  - ※ (싱크홀 원인) 하수관 결함(46%), 상수관 결함(8%), 부실 공사·주변 공사 등(46%)

③ [하천 관리]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관리

- **(4대강 보)** 물 이용 여건, 수질 등을 종합고려한 **최적 운영방안** 마련
  - ※ 금강·영산강은 진행 중인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
  -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기상 여건과 함께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활용성\*** 제고
    - \* (농번기·가뭄) 물 이용 필요 → 수위 유지 / (농조 발생) 물 흐름 필요 → 탄력적 개방
- **(명품하천)**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
  - \* 홍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조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환경부, 2023. 1. 3.)

☐ **스마트한 홍수 관리**

- ◆ 집중호우('22.8) → 서울 침수, 태풍 힌남노('22.9) → 포항 침수 재발 방지
- ☐ **(예보) AI 홍수예보**(국가 단위 세계 최초, 디지털트윈(담-하천 범람 예측) 도입
  - 빠르고(3시간 → 6시간 전) 촘촘한 예보\*로 침수위험 조기경보
  - \* 서울 도림천 시범 적용('23.6) → 국가+지방하천 223개 지점으로 확대
- ☐ **(정보제공) 홍수위험지도**(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조기 구축(~'24)
  - \* (기준) 500년 빈도 강우 → (보완)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최대 홍수 사례까지 표시
  - \*\* 당초 '25년 목표 → '24년까지 조기 제작('23년 1,132개 → '24년 1,794개 읍면동 완료)
- ☐ **(인프라)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 구축**('23~'27)
  - (도심) 대심도 빗물 터널(광화문, 강남역), 하수관 키우기 등
  - (하천) 지하 방수로(도림천, 소규모 댐(포항 행사댐), 강변 저류지(안양 목감천)
  - 제방 보강 등 국가하천 대폭 정비('22, 4,100억원 → '23, 4,510억원)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광재 의원안: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및 공사비용 국고부담](#) 2022. 5.

[박대수 의원안: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2022. 11.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보도자료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환경부 누리집

[환경백서 2022](#) 환경디지털 도서관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2. 8.

현재 하천관리 체계는 환경부 소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지방하천’과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으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개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하천의 이수, 치수 및 환경 측면의 고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하천법」 대상에 소하천을 포함하거나, 「소하천 정비법」을 「하천법」 수준으로 전부개정하는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9. 16.

- ☐ 2022년 8월 8일~1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도시침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임
- ☐ 이번 도시홍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통합 추진 체계 미흡, ② 복수의 중대본 운영, ③ 뒤편은 재난문자 발송, ④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체계 훼손 등이 제기됨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넷째,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1. 8.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최상위 물관리 기관이다. 2019년 출범한 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제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회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물 분쟁 및 하천수 사용량 조정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많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2. 25.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의 물관리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21.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 ..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